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결과

2018. 2.



국 가 기 록 원
수 집 기 획 과

목 차

I. 추진 배경 및 분석 대상	1
II. 생산현황 취합 결과	2
III.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유형별 세부내용	3
1. 일반기록물	3
2. 조사·연구·검토서	6
3. 회의록 및 속기록	8
4. 시청각기록물	11
5. 비밀기록물	13
6. 정부간행물	16
7. 행정박물	18
IV. 향후계획	20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결과

I. 추진 배경 및 분석 대상

□ 추진 배경

○ 각급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

○ 주요기록물의 생산·관리 강화 및 향후 이관대상 선별 자료로 활용

※ 관련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추진 경과

○ '17년도 각급 기관 기록물 생산현황 제출 요청('17. 4.)

○ 기록물 생산현황 미통보 기관 제출 독려('17. 9.)

○ '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요청('17. 9.)

- 각 부처 담당자(수집 3관) 및 기록물 유형별 담당자(수집기획과, 전자기록관리과)

□ 분석 대상

○ (대상) 48개 중앙행정기관

※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은 기록물 유형별 생산현황 통계만 파악

○ (유형) 일반기록물,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7종)

○ (방식) 유형별 내역 분석, 생산의무 이행여부 점검, 미비점 및 보완사항 정리

II. 생산현황 취합 결과

□ 생산현황 통보(713개 기관)

(‘17.12.31.현재)

구 분	대상기관	통보기관	통보율(%)
합 계	713	713	100%
중앙행정기관	48	48	100
특별행정기관	129	129	100
군(軍)기관	16	16	100
광역자치단체	17	17	100
기초자치단체	228	228	100
광역교육청	17	17	100
지역교육청	176	176	100
정부산하공공기관	39	39	100
국공립대학	43	43	100

□ 기록물 유형별 생산내역(2016년)

(단위 : 권, 건, 점)

구분	일반기록물		조사연구 검토서	회의록	시청각 기록물	비 밀 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보유현황)
	종이(권)	전자(건)						
합 계	7,853,419	636,643,607	4,318	340,850	1,220,542	122,014	54,438	385,021
중앙행정기관	703,117	21,658,141	901	4,668	16,945	23,239	4,142	11,115
특별행정기관	1,220,978	71,580,423	74	11,118	23,335	29,694	342	14,276
군기관	376,037	38,690,535	24	470	189,136	43,731	2,469	22,596
광역지자체	372,655	50,208,627	88	5,291	47,057	1,782	1,460	14,895
기초지자체	2,445,598	246,760,188	2,009	39,326	712,572	10,730	2,456	51,615
광역교육청	576,923	41,730,076	158	65,391	33,040	2,607	10,721	58,604
지역교육청	1,303,929	122,484,951	116	202,384	162,776	8,603	23,306	201,768
정부산하기관	783,980	32,739,630	718	4,194	10,327	1,447	9,300	6,889
국공립대학	70,202	10,791,036	230	8,008	25,354	181	242	3,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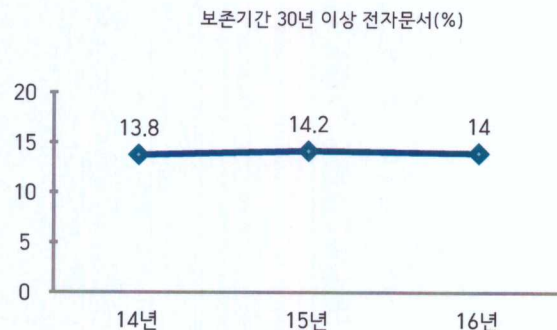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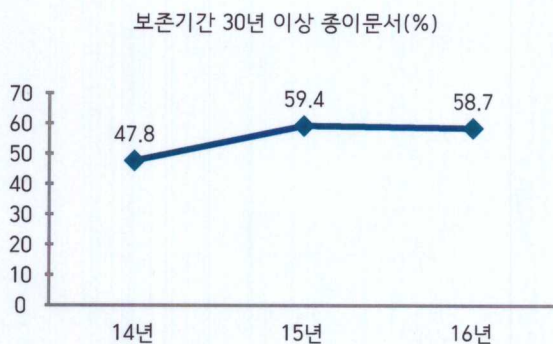
Ⅲ. 중앙행정기관 기록물 유형별 세부내용

1 일반기록물

□ 주요 내용

○ 기록물 생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자문서 생산 증가

- 전년도 대비 종이문서 생산량은 감소(▼286,967권)하였으나 전자문서는 비약적으로 증가(▲2,988천건)
 - 종이문서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이 생산량의 절반 이상(58.7%) 차지
 - 전자문서는 한시 기록물이 대부분을(86%) 차지하며, 최근 3년간 같은 추세임
- ※ 보존기간 10년 미만 단위과제 생성이 대부분이어서 한시기록물 증가



○ 핵심기록물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기간 책정 필요

- 동일한 내용의 종이문서와 전자문서 간에 상이한 단위과제 부여로 인해 보존기간별 생산량 차이 발생 가능
- 종이문서의 경우 업무 책임 규명 등으로 과도한 보존기간 책정, 전자문서의 경우 교육 미비에 따른 기계적인 단위과제 책정

□ 미비점 및 보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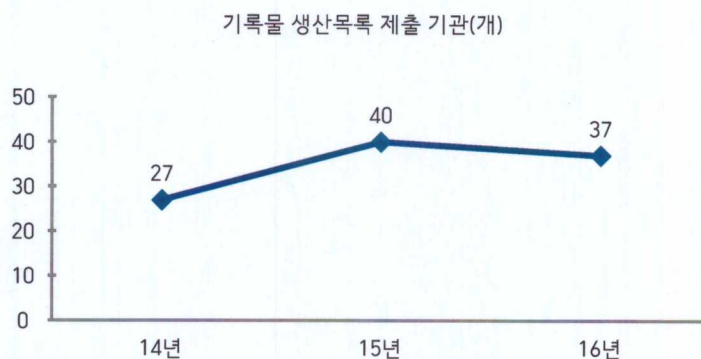
○ 기록물 생산목록 미제출 기관 존재

- 데이터 송수신 오류, 기록관리시스템 미도입 등으로 기록물 생산 목록 미제출 기관(11개)* 발생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기록물 생산목록 미제출 사유 》

- 업무관리시스템(기록물생산시스템)에서 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 지연
 - 기관 내 노후된 인프라(RMS)의 개선 지체로 기록물의 인수·인계 미흡
- 생산기관(RMS)에서 국가기록원(CAMS) 반영 단계에서 규격불일치 등 오류 발생



○ 기록물 생산목록 미제출 기관 대상 보완 자료 제출 독려

- 목록 미제출 사유 및 보완 자료 서면 제출 요청
- 기관내 사정*으로 인한 목록 미제출 기관은 서면 제출 후 CAMS 등록 또는 공문 처리 등의 해결방안 강구

* RMS 미도입([redacted]), 데이터 송수신 오류([redacted], [redacted]),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 지연([redacted], [redacted]) 등 사안별 처리대책 마련 필요

- CAMS 목록 제출시 데이터 변환 오류, 기록물 생산·관리시스템 간의 메타 규격 불일치 등의 업무 지연 사유 해소 필요

<일반기록물 보존기간별 생산현황(최근 3년)>

연도	기록물 유형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2016	전자	수량(천건)	21,658 (100%)	927 (4%)	817 (4%)	1,362 (6%)	2,928 (14%)	5,525 (26%)	9,677 (45%)	422 (2%)
	종이(권)	소계	703,117 (100%)	18,362 (2.6%)	192,218 (27%)	205,046 (29.1%)	82,965 (11.8%)	57,447 (8.2%)	145,014 (21%)	2,065 (0.3%)
		문서	324,718	11,724	12,475	13,179	82,913	57,388	144,984	2,055
		카드	377,504	6,394	179,314	191,734	7	44	7	4
		도면	895	244	429	133	45	15	23	6
2015	전자	수량(천건)	18,670 (100%)	877 (4.7%)	743 (4%)	1,034 (5.5%)	2,645 (14.2%)	4,672 (25%)	8,389 (45%)	310 (1.6%)
	종이(권)	소계	990,084 (100%)	16,079 (1.6%)	280,800 (28.4%)	291,547 (29.4%)	125,085 (12.6%)	97,212 (9.8%)	177,288 (17.9%)	2,073 (0.3%)
		문서	309,483	7,642	8,355	9,904	45,734	58,586	177,192	2,070
		카드	679,689	8,159	271,925	281,637	79,317	38,586	63	2
		도면	912	278	520	6	34	40	33	1
2014	전자	수량(천건)	18,765 (100%)	838 (4.5%)	708 (3.8%)	1,032 (5.5%)	2,669 (14.2%)	4,797 (25.6%)	8,425 (44.9%)	296 (1.5%)
	종이(권)	소계	627,563 (100%)	8,647 (1.4%)	131,604 (21%)	159,647 (25.4%)	84,625 (13.5%)	81,802 (13%)	158,498 (25.3%)	2,740 (0.4%)
		문서	262,833	4,127	5,670	3,373	31,915	56,572	158,436	2,740
		카드	363,838	4,377	125,209	156,254	52,707	25,229	62	0
		도면	892	143	725	20	3	1	0	0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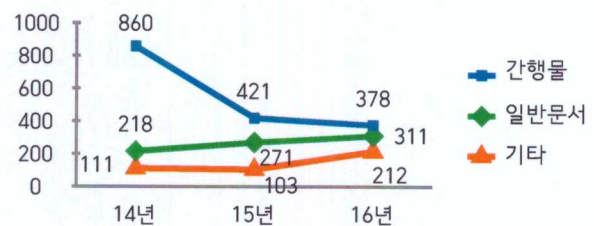
○ 조사·연구·검토서 생산건수 증가 및 간행물 비중 감소

- 전년 대비 총 생산건수 증가('15년 795건→'16년 901건, ▲13%)
- 작성대상으로 법령·조례·주요 정책·대규모 사업 관련 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이 대부분이며(554건, 61.5%), 간행물 형태 생산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조사연구검토서 생산 현황(건)



조사연구검토서 형태별 생산현황(건)



□ 미비점 및 보완사항

○ 조사·연구·검토서 미생산 기관 증가 및 현황·목록 불일치

- 전년 대비 조사·연구·검토서 미생산 기관이 증가('15년 10개→'16년 12개)* 하였으며, 4개 기관**은 3~4년 연속 미생산 통보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redacted]([redacted]), [redacted]([redacted]), [redacted], [redacted]

- 생산현황과 생산목록이 불일치한 기관* 발생 등 통계 신뢰성 저하

* [redacted]과 [redacted]은 현황 미제출이나 [redacted] 1건, [redacted] 8건 목록 제출, [redacted]은 현황 4건·목록 3건으로 통계 불일치

○ 조사·연구·검토서 생산 예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생산 또는 소량 생산에 대한 사유 확인 및 지속적인 생산현황 이력 파악 필요

- 조사·연구·검토서 생산 유형 및 수량 등을 분석하여 향후 생산현황 제출시 구체적인 통보 대상 유형 제시 필요

※ 온나라정책연구시스템(PRISM)* 게시 보고서 일괄 제출, 업무관리시스템 등
록 보고서 제출 등의 기준 필요 * 정책연구보고서 공유 시스템

- 특히, 3년 연속으로 미생산 통보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담당자 면담 등의 보완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조사·연구·검토서 형태별 생산현황(최근 3년)〉

구 분		계	형 태		
			일반문서	간행물	기타
	계	901	311	378	212
2016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	247	205	21	21
	2. 조례 제정,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18	7	11	0
	3.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사항	17	17	0	0
	4. 국제기구, 대외 조약·협약 등	23	13	2	8
	5. 대규모 사업·공사(국가재정법)	42	21	20	1
	6. 기타(기록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554	48	324	182
	계	795	271	421	103
2015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	167	131	9	27
	2. 조례 제정,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64	40	23	1
	3.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사항	36	36	0	0
	4. 국제기구, 대외 조약·협약 등	43	30	5	8
	5. 대규모 사업·공사(국가재정법)	26	6	16	4
	6. 기타(기록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459	28	368	63
	계	1,189	218	860	111
2014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152	103	36	13
	2. 조례 제정,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25	11	13	1
	3.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사항	16	15	0	1
	4. 국제기구, 대외 조약·협약 등	40	38	2	0
	5. 대규모 사업·공사(국가재정법)	37	14	22	1
	6. 기타(기록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919	37	787	9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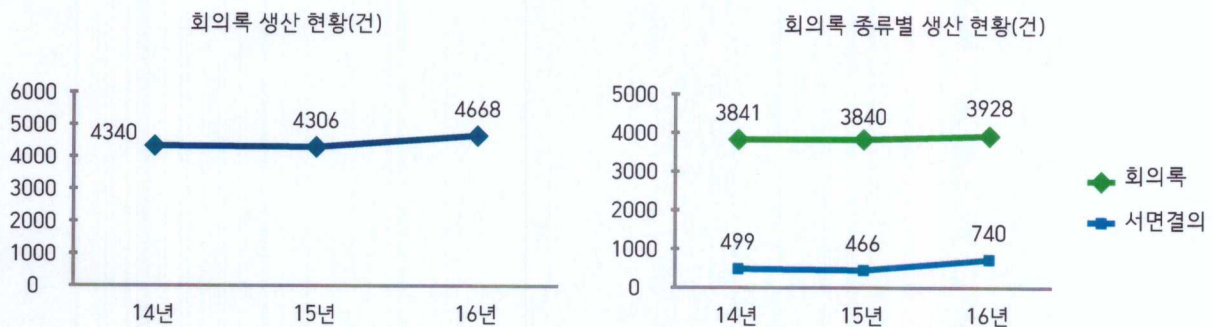
회의록 및 속기록

□ 주요 내용

○ 회의록 생산건수 증가 및 위원회 회의록 생산 비중 유지

- 분석 대상 기관 중 44개 기관이(91.7%) 회의록 생산 현황통보
- 전년도 대비 회의록 생산량이 증가('15년 4,306건→'16년 4,668건, ▲8.4%) 하였고, 위원회·심의회 회의록* 생산이 매년 높은 비중임

*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회의록('16년 총 4,668건 중 3,978건 차지, 85.2%)



□ 미비점 및 보완사항

○ 생산현황과 생산목록 제출 불일치 또는 속기록 미작성 사례 발견

- 회의록 생산 예상 기관()의 기록물 미생산 및 현황과 목록이 불일치한 기관() 발생

- 속기록 작성 지정회의(71개) 중 미개최(20개) 또는 서면으로만 개최(14개)

※ 붙임 : 회의록·속기록 작성 대상 및 공공기록물 지정 회의 현황 참고

- 속기록 작성 지정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속기록 미생산 기관(2개) 확인*

* (), (), ()

()

〈속기록 작성 지정회의 중 미개최 또는 서면 개최 현황〉

구분	소관기관	대상회의
회의 미개최 (20)	(1)	
	(1)	전원회의
	(3)	위원회
		협의회
		심의위원회
	(3)	
	(1)	위원회
	(1)	위원회
	(3)	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회
	(3)	위원회
		위원회
		심의회
(1)	위원회	
(1)	협의회	
(2)	위원회	
	위원회	
서면회의만 개최 (14)	(1)	위원회(3회)
	(1)	위원회(4회)
	(4)	위원회(1회)
		심의회(4회)
		심의회(1회)
		위원회(5회)
	(2)	위원회(2회)
		심의회(2회)
	(1)	위원회(1회)
	(1)	협의회(7회)
	(4)	위원회(4회)
		위원회(1회)
위원회(1회)		
위원회(1회)		

- 회의록 생산·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파악 및 점검 필요
 - 회의록 생산현황(목록) 미제출 기관 실태 파악 및 미제출 사유 확인
 - 회의록 생산·관리 관련 평가지표 안내 및 생산의무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업무 안내 등으로 의식 수준 제고
- 속기록 작성 지정회의의 현행화 및 생산 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기존 속기록 작성 지정회의(71개) 분석을 통한 현행화로 중요사안 관련 회의에 대한 속기록 생산 독려
 - 중요 회의의 경우 서면결의(속기록 미생산) 지양 및 소집회의 개최 유도

<회의록 및 속기록 작성 현황(최근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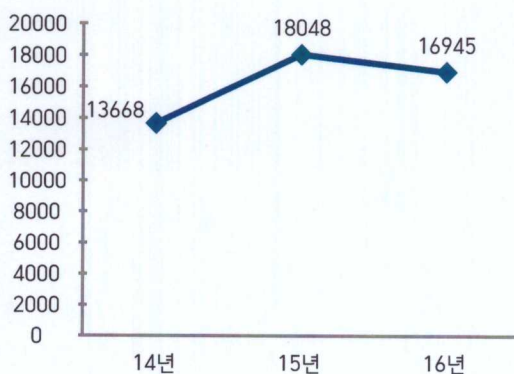
구 분		계 (회의록+서면결의)	회의록	서면결의	회의소집	속기록
2016	계	4,668	3,928	740	3,973	838
	1. 대통령 참석 회의	115	115	0	115	1
	2. 국무총리 참석 회의	98	75	23	67	9
	3.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	322	279	43	286	89
	4. 정당협회의(차관급 이상)	0	0	0	0	0
	5.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3,978	3,329	658	3,348	724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 참석 회의	0	0	0	0	0
	7. 국장급 3인이상 참석회의(의견조정 목적)	4	3	1	3	0
	8. 기타	142	127	15	154	15
2015	계	4,306	3,840	466	3,769	814
	1. 대통령 참석 회의	58	58	0	58	0
	2. 국무총리 참석 회의	40	25	15	24	11
	3.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	305	255	50	251	96
	4. 정당협회의(차관급 이상)	0	0	0	0	0
	5.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3,722	3,380	342	3,272	691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 참석 회의	0	0	0	0	0
	7. 국장급 3인이상 참석회의(의견조정 목적)	14	10	4	10	1
	8. 기타	167	112	55	154	15
2014	계	4,340	3,841	499	3,943	753
	1. 대통령 참석 회의	60	60	0	60	0
	2. 국무총리 참석 회의	73	62	11	59	11
	3. 차관급 이상 참석 회의	267	220	47	294	128
	4. 정당협회의(차관급 이상)	0	0	0	0	0
	5.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3,248	2,899*	349	2,943	593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 참석 회의	4	4	0	0	0
	7. 국장급 3인이상 참석회의(의견조정 목적)	11	8	3	6	0
	8. 기타	677	588*	89	581	21

* 생산현황 분석 이후 후속조치로 회의 해당 호수 일부 조정(5호→8호)

□ 주요 내용

-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 통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시 기록물 중심으로 생산
 - 분석 대상 기관 중 44개 기관이 시청각기록물 생산 현황을 통보(91.7%) 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유사한 수준(▲1기관)의 통보 현황 유지
 - 전년도에 비하여 생산량은 감소(▼6.1%)했으며, ■■■■■(5,153건) → ■■■■■(4,008건) → ■■■■■(2,181건) 순으로 생산량이 많음
- 기록물 생산 환경 변화(종이문서→전자문서)에 따라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매체에도 변화 추세
 - 전년도 대비 사진/필름 2,041건(▲24.4%), 오디오류는 1,380건(▲42.7%) 증가하였으나, 비디오류는 4,524건(▼70%)로 급격히 감소
 - 시청각 기술 발전·변화 수요에 따라 시청각기록물도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구현될 수 있는 매체 중심으로 생산하는 경향 뚜렷

시청각기록물 생산 현황(건)



시청각기록물 형태별 생산 현황(건)



□ 미비점 및 보완사항

- 통보 기관 수는 증가('15년 43개→'16년 44개)하였으나 생산·보유량은 감소('15년 18,048건→'16년 16,945건)하고 생산현황과 생산목록이 불일치한 기관 발생
- 미생산 기관 수는 전년도와 유사('15년 6개→'16년 5개)하나 현황과 목록이 불일치한 기관(11개) 다수 발견

구 분	기 관 명
미생산(5)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불일치(11)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redacted]는 통보 대상 중 일부 기록물 수량 누락

- 시청각기록물 생산현황과 생산목록 불일치 원인을 파악하여 명확한 통보 기준 마련 필요
- 기록물 건별 수량 또는 주제(철명)별로 묶어서 통보하는 등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통계의 정확성에 한계
-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기록원 시청각기록물 통보 기준(기록물 수량 또는 주제(철명)) 제시
- 시청각기록물 통계 불일치, 미통보 등 미흡기관의 보완 조치 추진
- 통계 불일치 기관(11개)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수정 요청, 미통보 기관의 실태 파악 진행

〈시청각기록물 형태별 생산 현황(최근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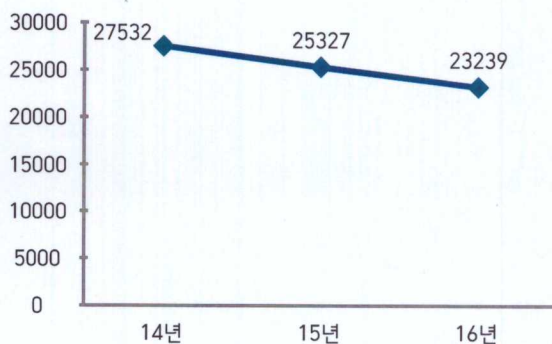
(단위 : 건, 권, 점)

구분	생산현황			
	2014	2015	2016	
			소계	비율
계	13,668	18,048	16,945	100%
사진/필름류	5,468	8,361	10,402	61.5%
오디오류	90	3,232	4,612	27%
비디오류	8,110	6,455	1,931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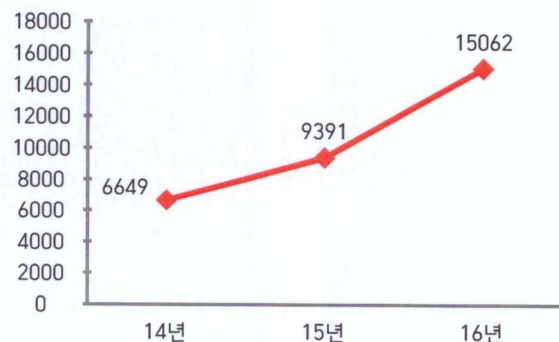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비밀기록물 생산량 감소 및 재분류 증가 등 기록물의 공개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변화
 - 전년 대비 비밀기록물 감소('15년 25,327건→'16년 23,239건, ▼8.2%), 재분류 (일반문서 전환) 증가('15년 9,391건→'16년 15,062건, ▲37.7%)
 - 등급별 생산 현황은 1~3급 5% 감소('15년 7,833건→'16년 7,438건), 대외비* 9.7% 감소('15년 17,494건→'16년 15,801건)
 - * 대외비는 비밀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었으나(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3항) 생산 현황 통보에서는 제외되었다가 '14년부터 추가하여 관리 중
- 특수기록관 외에도 특정 사업 추진 및 산업 기술 개발·관리 관련 기관에서 비밀기록이 다수 생산
 - [redacted] (17,529건), [redacted] (908건), [redacted] (697건), [redacted] (555건), [redacted] (400건), [redacted] (368건), [redacted] (253건)

비밀기록물 생산 현황(건)



비밀기록물 재분류 현황(건)



□ 미비점 및 보완사항

○ 1급 생산량은 거의 없거나 비밀보다 대외비 중심으로 생산되는 등
사안별 적정 등급 기준 적용 미비

- 전년 대비 미생산 통보 기관수*는 감소했으며(4개→3개), 대외비가
총 생산량의 68%(15,801건) 차지

* [REDACTED], [REDACTED], [REDACTED]

- 대외비 책정 사유 및 비밀 등급 적용에 대한 기관 실태 파악 필요
- 등급별, 보존기간별, 보호기간별 생산현황의 통계 불일치 기관 감소
(‘14년 13개→’15년 9개→’16년 7개 기관)

〈등급·보존기간·보호기간 통계 불일치 기관〉

구 분	등급별 (1~3급, 대외비)	보존기간별 (~50이하 ~30미만 30이상~)	보호기간별 (5,10,20,30,30이상,기타)
[REDACTED]	190	189	189
[REDACTED]	253	269	238
[REDACTED]	120	113	120
[REDACTED]	697	698	697
[REDACTED]	17,529	17,166	17,560
[REDACTED]	13	3	8
[REDACTED]	72	66	50
합계	18,874	18,504	18,862

○ 미생산 통보 기관(3개)의 현황 점검 및 통계 불일치 기관(7개)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한 후속 조치 필요

- ‘18년 기록물관리지침 교육시 비밀기록물 등급·보존·보호기간별
통계 일치 후 통보 안내, 불일치 기관의 현행화 요청
- 미생산 통보 기관은 관련 업무 담당자(기록물관리, 비밀기록관리) 면담을
통해 비밀기록물 미생산 여부 및 미생산 원인 확인, 통보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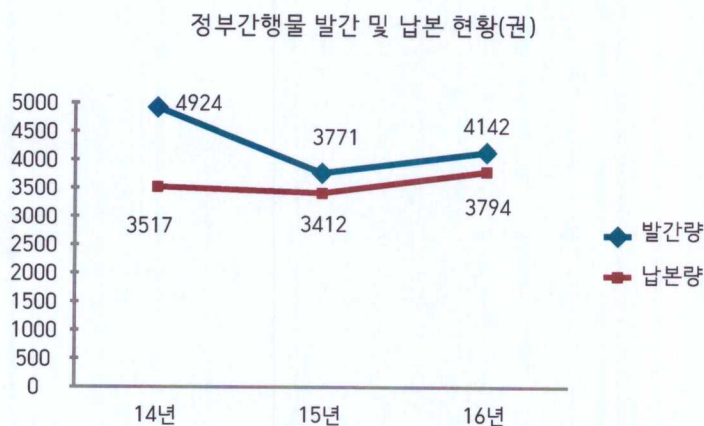
<비밀기록물 생산 및 재분류 현황(최근 3년)>

(단위 : 건, 권, 점)

구분		생산 현황					재분류 현황				
		소계	문서	도면 카드	시청각	간행물	소계	문서	도면 카드	시청각	간행물
2016	계	23,239	23,010	36	44	149	15,062	14,991	0	4	67
	1급	0	0	0	0	0	0	0	0	0	0
	2급	709	689	3	5	12	282	274	0	0	8
	3급	6,729	6,606	10	31	82	2,964	2,931	0	0	33
	대외비	15,801	15,715	23	8	55	11,816	11,786	0	4	26
2015	계	25,327	25,071	27	84	145	9,391	9,380	6	1	4
	1급	1	1	0	0	0	3	3	0	0	0
	2급	771	753	2	5	11	392	382	2	0	1
	3급	7,061	6,905	8	71	77	1,693	1,688	2	1	2
	대외비	17,494	17,412	17	8	57	7,303	7,300	2	0	1
2014	계	27,532	27,438	33	18	43	6,649	6,638	6	0	5
	1급	0	0	0	0	0	0	0	0	0	0
	2급	875	846	5	6	18	316	313	2	0	1
	3급	7,835	7,796	14	9	16	1,752	1,746	2	0	4
	대외비	18,822	18,796	14	3	9	4,581	4,579	2	0	0

□ 주요 내용

- 전년도 대비 정부간행물 생산 및 납본 의무에 대한 인식도 향상 파악
 - 전체 대상기관(48개)이 간행물 생산현황을 통보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납본 기관도 증가('15년 24개→'16년 43개, ▲ 79%)
 - 전년도 대비 발간 수량('15년 3,771권→'16년 4,142권, ▲ 9.8%)과 납본 수량('15년 3,412권→'16년 3,794권, ▲ 11.2%) 모두 증가



□ 미비점 및 보완사항

- 간행물 미생산 및 납본 누락 등 간행물 생산·관리 미비점 확인
 - 대상 기관 중 간행물 미생산(3개)*과 납본 누락(4개)** 파악
 - * 미생산 기관(3개) : [redacted], [redacted], [redacted]
 - ** 납본 누락 기관(4개)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생산 통보)
- 간행물 통보 기준 제공 및 누락 없는 납본을 위한 간행물 생산·관리 지침 필요
 - 간행물 발간·납본 불일치 개선을 위한 국가기록원 차원의 기준 제시
 - 모든 발간물의 기록관 이관 후 납본 현황 파악, 납본 간행물의 일괄

통보 등 기록물관리지침 발송시 안내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납본 현황 일치, 납본을 통한 생산 통계 집계 등 생산 현황의 신뢰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정부간행물 생산 및 납본 현황(최근 3년)〉

(단위 : 권)

구 분	발간량	납본량	납본률(%)
2016	4,142	3,794	91.6%
2015	3,771	3,412	90.5%
2014	4,924	3,517	71.4%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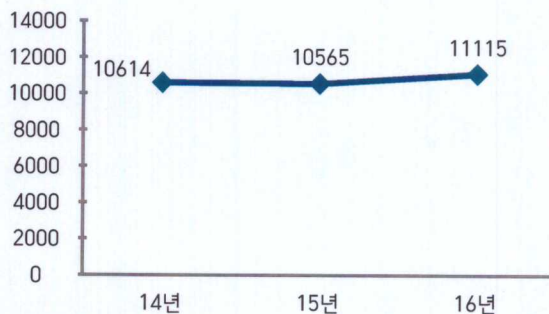
○ 전년도 대비 행정박물 관리에 대한 기관의 인식 향상 추세

- 전년 대비 보유 현황 통보 기관 수('15년 34개→'16년 48개, ▲41%) 및 보유량 증가('15년 10,565점→'16년 11,115점, ▲5.2%)
- 전년 대비 행정박물 미보유 통보 기관* 수('15년 15개→'16년 7개) 감소 및 보유율 증가(8개 기관, ▲24.2%)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유형별로는 그 밖의 유형(34.7%)→기념류(28.2%)→상징류(19.8%) 순

행정박물 보유 현황(점)



행정박물 유형별 보유 현황(점)



□ 미비점 및 보완사항

○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 이해 부족, 처리과 보유량 파악 한계 등으로 통계와 목록의 불일치 발생

- 일부 기관(10개)*의 경우 통보 보유 목록과 수량이 불일치하여 통계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 기관에 따라 행정박물 유형별로 적용 기준이 상이*하여 유형별로 정확한 통계 도출이 어려움

* 기념패 : 상징류와 기념류, 상장·훈장류 / 깃발 : 견본류, 그 밖에 유형 등

○ 행정박물 개념과 유형별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적용 및 예외 제시, '그 밖의 유형'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등 모호한 기준의 구체적 예시를 지침 교육 등에서 안내

〈행정박물 유형별 보유 현황(최근 3년)〉

(단위 : 점)

연도	합계	관인류	견본류	상징류	기념류	상장훈장류	사무집기류	그 밖의 유형 (선물 등)
2016	11,115	529(4.7%)	322(2.9%)	2,205(20%)	3,134(28.2%)	906(8.2%)	158(1.4%)	3,861(34.7%)
2015	10,565	535	246	2,063	2,865	860	156	3,840
2014	10,614	524	312	1,979	3,355	840	161	3,443

IV. 향후계획

- 생산현황 분석결과에 따른 미흡 기관 및 미제출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지침교육, 현황 점검 및 컨설팅 등) ~'18.4
- 생산현황 제출 서식 간소화 확정 후 생산기관 통보 ~'18.4
-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 개선점 반영한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업무 개선 방안” 수립(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 과제와 연계) ~'18.6

붙임

회의록·속기록 작성 대상 및 공공기록물 지정 회의 현황

《회의록·속기록 작성대상 회의 현황》

구 분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	속기록 지정회의		
		소 계	대통령 속기록	정 부 속기록
합 계	3,215	92	21	7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9	8	8	0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42	20	1	19
주요 정책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한 차관급 이상 구성원인 회의	80	32	8	24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432	32	4	28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회의('14. 11. 개정, '15. 11. 시행)	2,652	-	-	-

《공공기록물 지정 회의 현황》

구분	소관기관	대상회의	관련규정
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정책기본법
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3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4	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6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7	국민안전처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8		중앙민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0		함정 항공기 등 규격 및 장비선정 심의위원회	해양경찰청 해상치안장비 도입업무 규칙
11	국방부	국방부 정책회의	국방부훈령 제981호
12		군무회의	국방부훈령 제981호
1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14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5	국토교통부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6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7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	기획재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규정
20		시도경제협의회	시도경제협의회규정
2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2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규정
23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24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5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축산법
26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법

구분	소관기관	대상회의	관련규정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기본법
2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9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법
30		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법
3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법
33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34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기본법
35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36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37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
38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
39	산업통상 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40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41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42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4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4		외국인투자위원회	외국인투자촉진법
45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46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4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48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49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0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법
51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법
52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
5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54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6.25전쟁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6.25전쟁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56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57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5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9		기록물공개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0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1		기부심사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6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3		도서개발심의회	도서개발촉진법
64		서해5도 지원위원회	서해5도지원특별법
65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66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접경지역지원법
67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법
68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69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70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7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